

한탄강댐 건설여부 내달 결론

강원·경기주민 찬반논쟁으로 3년째 표류 이해당사자간 조정... 갈등해결 모델로 주목

한탄강댐 건설을 놓고 3년째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의 최종 조정 시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와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탄강댐 갈등조정 소위는 오는 25일부터 양평에서 마지막 조정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소위는 조정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 찬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

이다. 소위는 그러나 이번 조정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1~2차례 조정회의를 추가 개최,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론지를 방침이어서 늦어도 다음달에는 한탄강댐 건설 여부가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특히 한탄강댐 문제는 갈등을 겪고 있는 국책사업과 관련, 처음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어서 갈등 해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소위는 한탄강댐 건설 사업이 찬반 논란으로 표류하자 지난 6월 찬반 주민(8명)과 정부 관계자(3명), 환경단체(3명), 소위 위원(3명) 등 17명으로 한탄강댐 조정회의를 구성, 이달말 시한으로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계속해 왔다.

정부는 임진강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1999년부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관인면 중리 일대에 담수량 3억1500만t 규모(높이 85m, 길이 705m)의 한탄강댐을 건설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나 지난해 9월 사업계획 고시를 앞두고 경기 연천, 포천, 강원 철원 주민간 찬반 논쟁이 계속되면서 댐 건설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신상득기자

/twins518@segye.com